

〈2016 미국대통령 선거 ⑥〉

2016 미국 대통령선거, 추세인가? 예외적 현상인가?

2016.12

YDI Report



〈2016 미국대통령 선거 ⑥〉

2016 미국 대통령선거, 추세인가? 예외적 현상인가?

작 성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

담 당 유성현 (여의도연구원 연구원)

2016 미국 대통령 선거현황 및 정책이슈 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총 6차에 걸쳐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본 6차 보고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 분석한 글로,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여의도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연속보고서 발간 현황 - 1차 정권 재창출인가, 정권 교체주기인가?
2차 미국 대통령 선거 '이슈와 정책'
3차 美 대선, 이번 일어날까
4차 'Swing States'가 대선의 승패를 가른다
5차 美 대통령/의회 선거, 최종 승자는?



여의도연구원

《 요 약 》

- 2016년 미국 대선은 8년 임기를 마친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지 못하는 공식 선거로 현직 프리미엄(incumbent advantage)이 없었고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야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선거였음
 - 공식선거라는 불확실성 속에 치러진 선거이긴 하지만 민주당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공화당보다 우위에 있어 재집권 가능성이 높았음
- 2016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다음으로 의료보험, 테러리즘, 연방재정적자, 외교정책, 이민, 환경, 낙태 등이 중요한 이슈로 꼽혔음
 - 전체 유권자에게 경제와 테러리즘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점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미국의 경제상황과 테러리즘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것을 시사하였음
 - 하지만 정당지지자별 당파성에 따른 선호이슈는 양극화 돼 있었고 이에 따라 본선경쟁에서 클린턴과 트럼프는 스스로가 속한 정당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슈에 집중함
- 민주당 클린턴과 공화당 트럼프 간의 대결로 압축된 2016 미국 대통령선거는 9월 초 본선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지율의 격차가 좁혀졌지만 트럼프의 잇따른 추문이 터지고 후보 TV토론에서 클린턴이 선방하면서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 민주당이 클린턴 후보가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것으로 예측되었음
 - 지지율이 아닌 “선거인단지도(electoral college map)”의 측면에서도 민주당의 우세는 한층 더 확연하다고 예측되었음. 이런 예측은 선거 막판 클린턴에게 악재인 이메일 스캔들이 다시 불거졌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 기반해서 거의 모든 대중매체와 선거분석가들에게서 거의 확실할 것으로 받아들여졌음

- 하지만 선거 직전의 예상과 달리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귀결됨
 - 이러한 결과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 지역의 백인노동자들이 트럼프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정치적인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반면, 클린턴에 대한 비호감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까닭으로 이해됨

- 특히 많은 유권자들이 기존 제도정치권에 높은 불만을 갖고 있었고 이들로부터 스스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은 오랜 정치적 경력으로 기존 정치인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클린턴에게 약점으로 작용한 반면, 막말과 구설수에도 새로운 인물로서 트럼프의 차별성을 부각시킴
 - 게다가 트럼프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제도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부각, 그리고 자신의 차별성을 캠페인의 핵심전략으로 삼음. 또한 군중집회와 트위터를 통해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직접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스스로 '관심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함

- 이번 선거에서는 여론조사와 선거컨설턴트의 영향력 퇴조로 대표되는 캠페인 방식의 변화가 목격됨
 -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는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정보의 생산과 전달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독점적 지위와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에 기인함

- 결국 “정당유권자 재편성(partisan realignment)”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가시적 성과 여부와 민주당의 기존 지지층 회복 여부는 이번 대선 결과(현상)가 항구적으로 귀착될지 아닐지를 결정할 핵심 요인임

〈 차 례 〉

I. 2016 미국 대선과 정치적 배경	1
1. 변수 1: 공석(空席)선거의 불확실성	3
2. 변수 2: 유권자 선호이슈의 선점	4
3. 소결	9
II. 양당의 후보경선 과정: 주류와 비주류의 대결	11
1. 민주당: 샌더스 발 열풍 흡수한 민주당 주류	13
2. 공화당: 주류에 대한 분노로 승리한 트럼프	14
III. 정강과 정책	17
1. 공화당: ‘미국적’ 가치 회복	20
2. 민주당: ‘민주적’ 가치 회복	26
IV. 후보각축의 과정	31
V. 선거결과와 예비적 분석	35
1. 대통령선거 결과: 빗나간 예측	37
2. 클린턴은 왜 패배했는가?	39
3. 트럼프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42
VI. 평가와 전망	47
1. 트럼프 정치의 성공, 일시적인 현상인가	49
2. 트럼프 내각 구성과 논란	51
VII. 한국에의 시사점	53

I. 2016 미국 대선과 정치적 배경

1. 변수 1 : 공석[空席]선거의 불확실성

- 2016년 미국 대선은 8년 임기를 마친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지 못하는 공석 선거로 현직 프리미엄(incumbent advantage)이 없었고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야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선거였음
- 공석선거라는 불확실성 속에 치러진 선거이긴 하지만 민주당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공화당보다 우위에 있어 재집권 가능성이 높았음

민주당	공화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가 넘는 오바마의 업무수행 지지율(1988년 조지 부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당시 레이건 행정부의 지지율이 50%였음) - 대선을 앞둔 최근 1년 조사에서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층이 30%, 공화당 지지층이 25%로 나타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정당이 세 번의 대선을 연속으로 이긴 경우는 1988년 선거가 유일하고 장기적인 정당별 행정부 집권 기간도 평균 8.6년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집권당 교체주기 선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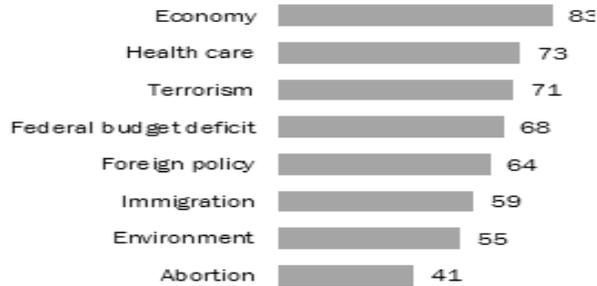
-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기존 지지층을 유지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의 업적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무당층 흡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했고,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수권정당으로서 공화당이 가진 능력과 비전을 보여줘야만 했음
- 결국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석선거를 앞둔 양당의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의 관심 사안에 최적화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술적 선택이었고, 이는 유권자 동원능력이 뛰어나면서도 무당파에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후보를 의미함

2. 변수 2 : 유권자 선호이슈의 선점

- 2016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다음으로 의료보험, 테러리즘, 연방재정적자, 외교정책, 이민, 환경, 낙태 등이 중요한 이슈로 꼽혔음

Economy Remains Top Campaign Issue

% of voters saying each will be "very important" to their vote for president in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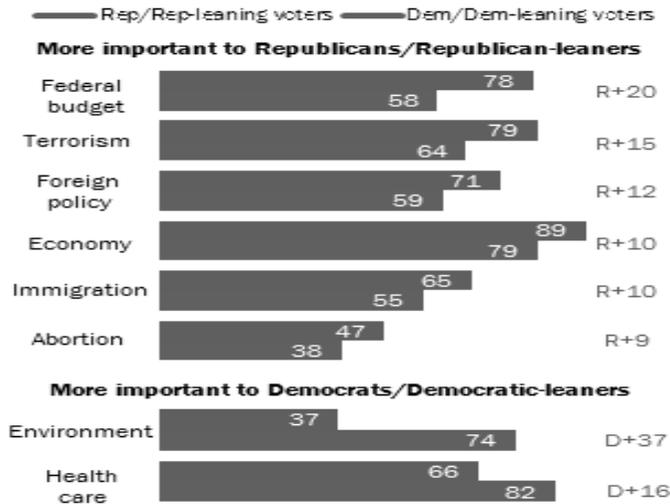


Survey conducted Sept. 22-27, 2015. Based on registered voters.

PEW RESEARCH CENTER

Wide Partisan Gaps Over Importance of Environment, Deficit, Health Care

% saying each is "very important" to their vote in 2016...



Survey conducted Sept. 22-27, 2015. Based on registered voters.

PEW RESEARCH CENTER

- 전체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각 이슈의 중요도에 대한 민주, 공화 양당 지지자들의 인식은 당파적으로 큰 차이를 보임

정당별 지지유권자 선호이슈 간극 컸던 선거

- 양당의 지지자들 모두 경제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지만 민주당 정당일체자들은 의료보험을 가장 핵심이슈로 꼽고 환경 이슈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공화당 정당일체자들은 연방재정적자와 테러리즘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 양당 정당일체자들의 인식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난 이슈는 환경문제로 민주당의 경우 74%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지만 공화당은 그 수치가 절반이 37%에 그쳤고 있음. 반면, 연방재정적자 이슈는 공화당 지지자 중 78%가 중요하다고 답한데 반해 민주당은 58%의 응답자만이 중요이슈로 꼽아 20%의 차이를 보임
- 정당지지자 별 당파적 차이는 본선경쟁에서 클린턴과 트럼프가 스스로가 속한 정당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어떤 이슈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줌
- 전체 유권자에게 경제와 테러리즘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점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미국의 경제상황과 테러리즘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시사하였음

선거 전후 경제와 테러리즘 상황, 대선의 가장 큰 외부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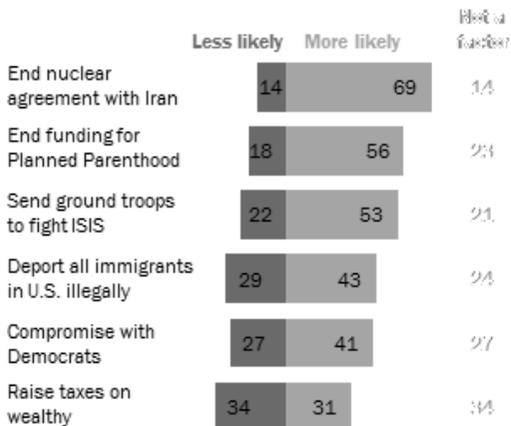
- 미국 대선은 민주, 공화 양당에 속해 있지 않은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심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환경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와 테러리즘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두 후보의 역량과 상관없이 민주, 공화 중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음
- 후보입장과 지지의향과 관련하여 민주, 공화 양당 내부는 그 양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공화당 지지유권자 내부 균열 커, 결집에 어려움 있어

- 공화당의 경우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연방지원 여부와 민주당과의 협상을 놓고 강경한 지지자들과 온건한 지지자들 간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 반면, 민주당의 경우 금융권 개혁과 이란 핵협상을 두고 진보-온건 지지자들 간의 후보지지의향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음
-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지유권자 내부의 균열은 민주당에 비해 공화당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이슈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입장 차이가 더 분명하게 갈려 있음을 보여주었음

How Possible Republican Primary Voters View Candidate Positions

Among possible Republican primary voters, % who would be ___ to support a candidate who wants t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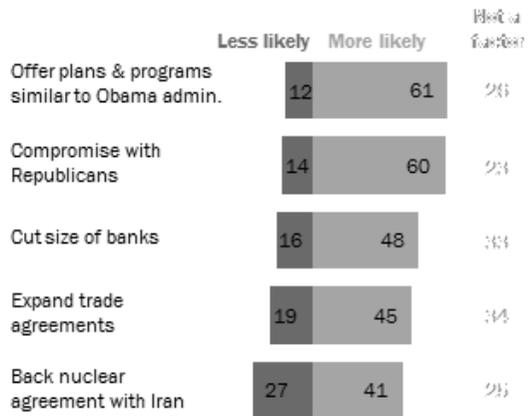


Survey conducted Sept. 22-27, 2015. Based on Republican and Republican-leaning registered voters who say they may vote in the Republican primary or caucus in their state (very/some/what/not too likely to vote). N=2996

PEW RESEARCH CENTER

How Possible Democratic Primary Voters View Candidate Positions

Among possible Democratic primary voters, % who would be ___ to support a candidate who wants to ...



Survey conducted Sept. 22-27, 2015. Based on Democratic and Democratic-leaning registered voters who say they may vote in the Democratic primary or caucus in their state (very/some/what/not too likely to vote). N=3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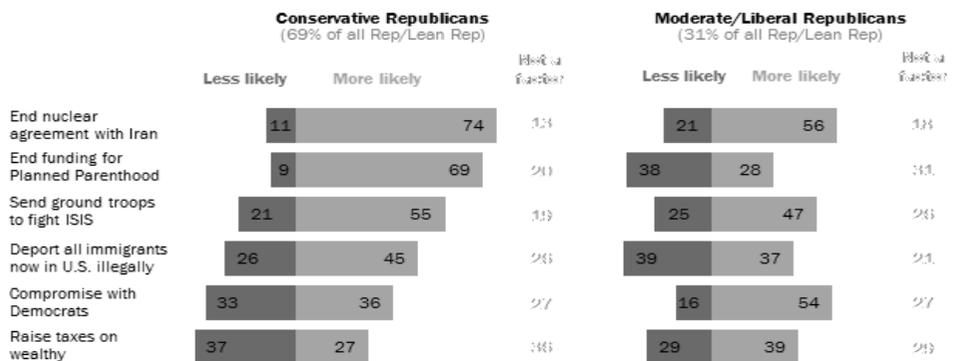
PEW RESEARCH CENTER

- 전체적으로 쟁점이슈를 둘러싼 전체 유권자들의 인식 분포가 민주당의 입장에 치우쳐 있는 까닭에, 적어도 정책이슈의 측면에서 민주당에 비해 공화당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선거였음

- 또한 이슈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분열이 민주당에 비해 더 심화된 상황인데 이는 티파티 세력을 중심으로 한 강경한 보수주의자들이 여전히 공화당에 중요한 세력으로 남아 있음을 의미함
- 반면 민주당의 경우 내부적 의견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적어도 정책적으로는 새로운 내용이 부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Wide Gaps Among Possible GOP Primary Voters in Views of Planned Parenthood Funding and Compromise With Democrats

Among possible Republican primary voters, % who would be ___ to support a candidate who wants t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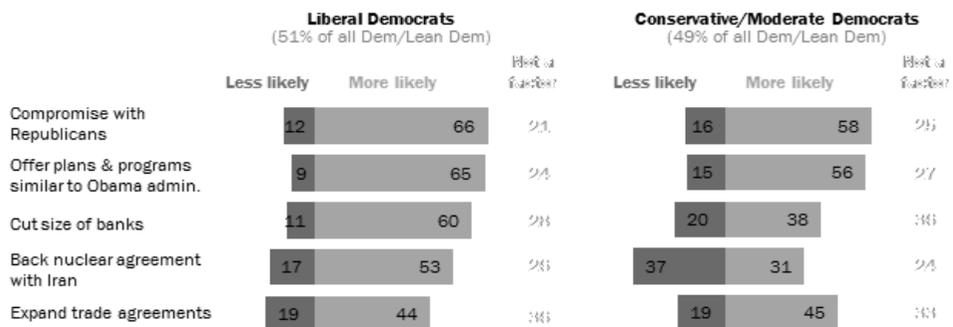


Survey conducted Sept. 22-27, 2011. Based on Republican and Republican-leaning registered voters who say they may vote in the Republican primary or caucus in their state (very/somewhat/not too likely to vote). Cons Rep/Lean Rep (N=336), Mod/Lib Rep/Lean Rep (N=143).

PEW RESEARCH CENTER

Democrats Ideologically Divided Over Candidate Support for Reducing Size of Large Banks, Iran Nuclear Agreement

Among possible Democratic primary voters, % who would be ___ to support a candidate who wants t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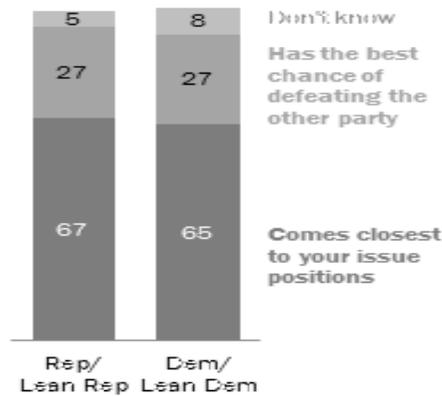


Survey conducted Sept. 22-27, 2011. Based on Democratic and Democratic-leaning registered voters who say they may vote in the Democratic primary or caucus in their state (very/somewhat/not too likely to vote). Lib Dem/Lean Dem (N=332), Cons/Mod Dem/Lean Dem (N=128).

PEW RESEARCH CENTER

Voters Prioritize Positions More Than Electability

% of voters who say it is more important to pick a candidate who...



Survey conducted September 22-27, 2015.
Based on registered voters.

PEW RESEARCH CENTER

3. 소결

- 요약하면 2016년 미국 대선은 공석선거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배태하고 있었으나, 오바마 행정부의 업무수행지지율이 임기 막판에도 50%를 상회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정책적으로도 전체유권자의 선호가 민주당의 입장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클린턴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에서 펼쳐진 선거였음
- 그러나 미국선거의 역사적 패턴에서 한 정당이 정치권력을 지속적으로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 오바마 행정부의 개혁정치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금융위기와 그에 이은 소득불균형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제도정치권에 대한 높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점은 주기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미국 유권자들의 성향에 비추어 결과의 불확실성을 높여주었음

Ⅱ. 양당의 후보경선 과정 : 주류와 비주류의 대결

1. 민주당 : 샌더스 발 열풍 흡수한 민주당 주류

- 민주당의 경우 유력후보인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경제적 양극화의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며 등장한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의 돌풍에 수세에 몰린 듯 보였으나, 3월 1일 슈퍼화요일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음. 이후 대의원의 수가 많이 할당되어 있는 4월 19일 뉴욕 주와 26일 펜실베이니아 주 등에서의 승리로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최종 승리자가 되었음
- 유력후보가 새로운 후보의 등장에 고전하다가 우세를 회복하는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반복되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
- 유사한 조건에서 치러진 2000년 민주당 후보경선에서도 유력후보였던 고어 부통령이 후발주자였던 브래들리 연방상원의원과 박빙의 경쟁을 보이다 3월 7일 슈퍼화요일에서 승기를 잡아 결국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바 있으며, 이전의 선거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반복적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이번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나타난 새로운 모습이 있다면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의 폐해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이를 효과적으로 캠페인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선두주자인 클린턴 후보와 유권자들에게 이 이슈의 중요성을 크게 각인시켰다는 점에 있음

2. 공화당 : 주류에 대한 분노로 승리한 트럼프

- 공화당 후보경선은 잭 부시와 마르코 루비오 등 주류 공화당 지도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주도할 것이라는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경선 초반부터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면서 최종적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었음
- 초반의 기세를 몰아 공화당 후보를 거머쥔 트럼프는 정치적 경력이 전무할 뿐 아니라 공화당 주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철저한 아웃사이드 후보였다는 점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었음
- 특히 파격적인 행동과 극단적인 선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트럼프의 돌풍은 공화당 내부의 결집과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중요시해온 기존 선거캠페인의 양상을 여실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음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게 만들었음
- 후보지지양상을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층은 거의 전 영역에 걸쳐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남성,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 저소득층, 중도적 성향,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 낮은 공화당 지지자들에게서 높은 지지가 나타났음

GOP Voters' Views of 'New Ideas,' Experience and the 2016 Campaign

Possible Republican primary voters who say it is more important for a candidate to have ...

First choice for the Republican nomination for president? (OPEN END)	All R/RL possible primary voters %	Experience and proven record (29%) %	New ideas and diff approach (66%) %
Trump	25	8	33
Carson	16	13	18
Rubio	8	6	9
Fiorina	8	8	7
Cruz	6	9	5
Bush	4	9	2
Huckabee	2	4	1
Paul	2	2	2
Other*	4	6	3
Don't know	25	34	19
	100	100	100

Survey conducted Sept. 22-27, 2015. Candidate preference question is open-ended question (Q36). Based on Republican and Republican leaning registered voters who say they may vote in the Republican primary or caucus in their state. *Other includes candidates who received less than 2% of overall support; see topline for more detail.

PEW RESEARCH CENTER

- 한편 공화당 후보 지지양상을 앞서 살펴본 변화와 경륜에 관한 유권자 인식과 결부시켜 살펴보면 트럼프는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에게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음
-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유권자들 특히, 공화당의 유권자들이 제도정치권과 공화당 주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극에 달해 있음을 알려준. 금융 위기 이후 더디게 회복되는 경제상황과 불평등의 심화, 보다 구체적으로 이는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행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 공화당 주류에 대한 실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또한 대중매체의 보도에서 간과되었지만 트럼프가 세금과 최저임금, 그리고 노동조합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백인 저소득 계층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또다른 이유였음. 이는 과거 공화당이 갖고 있는 정책적 성향 특히, 경제적 보수주의에 기반한 작은 정부의 지향이 적어도 주류 사회에 속해 있지 않은 백인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 더불어 트럼프의 과격하지만 간명한 입장 표명이 보수적인 대중매체들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이유. 정치적 양극화가 극명하진 상황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 민주당과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반감은 감정적인 측면에서 증오와 경멸 등의 혐오감으로 변질되기 쉬운데, 보수적인 대중매체들은 이러한 경향성을 더욱 증폭하였음
- 트럼프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의 또 다른 이유로는 공화당 경선에 임했던 후보들이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어필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점
- 애초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대두되었던 잭 부시는 전임 부시(G. W. Bush) 대통령의 부정적인 유산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가 경선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실패하였음. 크루즈 연방상원의원의 경우에도 공화당 주류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기득권층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고소득층 증세에 반대함으로써 서민층을 위한 정책 제시에는 한계를 보였음

- 트럼프의 성공과 기타 후보들의 실패는 공화당 내부를 크게 나누고 있는 두 이슈인 이민문제와 부자증세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후보지지의향을 살펴 보면 보다 분명하게 설명됨. 트럼프는 이민문제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고 부자증세에 찬성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에게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바, 이들은 공화당 주류에 대한 실망과 반감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이었음
- 이민문제와 부자증세가 서로 다른 차원의 쟁점이슈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후보지지의향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사실은 공화당 내부에서 정당의 정책적 성향을 구성하는 사회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보수주의의 각축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음
- 저소득, 저학력 백인 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가 손쉽게 공화당 후보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작은 정부와 시장의 자율성을 견지해 온 경제적 보수주의의 양상이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라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국 유권자들에게서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음을 의미

GOP Voters' Splits Over Immigration, Taxing Wealthy Is Reflected in Vote Priorities and Preferences

Possible Republican primary voters who ...

First choice for the Republican nomination for president? (OPEN END)	All R/RL possible primary voters	Likelihood of supporting a candidate who... Wants to deport all immigrants who are in the country illegally			Wants to raise taxes on wealthy Americans		
		More likely (43%)	Less likely (29%)	Not a factor (24%)	More likely (31%)	Less likely (34%)	Not a factor (34%)
Trump	25	34	13	23	35	16	24
Carson	16	16	17	17	12	23	12
Rubio	8	5	10	9	5	9	9
Fiorina	8	8	5	11	6	7	10
Cruz	6	6	4	7	3	9	7
Bush	4	2	8	3	5	4	4
Huckabee	2	4	1	2	1	4	3
Paul	2	2	3	3	3	1	3
Other*	4	3	4	5	3	3	5
Don't know	25	20	36	19	27	24	2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ay ___ is "very important" to 2016 vote							
Immigration	66	84	44	59	-	-	-
Economy	89	-	-	-	96	87	83

Survey conducted Sept. 22-27, 2015. Candidate preference question is open-ended question (Q35). Based on Republican and Republican leaning registered voters who say they may vote in the Republican primary or caucus in their state. *Other includes candidates who received less than 2% of overall support; see topline for more detail.

PEW RESEARCH CENTER

Ⅲ. 정강과 정책

정강과 정책 (공화당 vs 민주당)

구분	공화당 : '미국적' 가치 회복	민주당 : '민주적' 가치 회복
경제	권력 분산과 정부개입 최소화	중산층 재건과 경제불평등 완화
사회 I	헌법질서의 부활	차별철폐와 사회불평등 해소
사회 II	보수가치 회복 통한 위대한 미국사회 건설	교육/의료 공공성 강화
정치/정부	정부 관료와 규제의 축소	선거권 보장과 민주주의 증진
환경/에너지	실용주의 노선	기후변화 적극대응
국제	미국 이익이 우선	미국적 가치 확산 통한 글로벌 리더십 구축

1. 공화당 : '미국적' 가치 회복

- 7월 18일 발표된 공화당의 강령에서 각 주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앞서 제시된 서문(preamble)을 보면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한 믿음과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원칙에 기반한 공화당의 정책을 재확인하고, 민주당 행정부가 이러한 미국의 원칙과 자율성을 훼손해 왔다고 비판하고 있음
- 본문의 내용은 아메리칸드림의 재건(Restoring American Dream), 헌법질서의 부활(Rebirth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천연자원(America's Natural Resources), 정부개혁(Government Reform), 위대한 미국사회 건설(Great American Families, Education, Healthcare, and Criminal Justice), 미국의 재도약(America Resurgent) 등 모두 여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주제의 기술방식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행정부,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공화당 행정부는 미국적 가치와 원칙에 근거해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음
- 또한 미국의 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이젠하워, 레이건 등 공화당의 전임 대통령들의 업적을 수시로 거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 이러한 기술 방식은 트럼프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들이 그 내용의 과격함에 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결여되고 있기에 과거 공화당 행정부의 업적에 비추어 재확인하면서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Ⅰ 경제부문(Restoring the American Dream) :

권력의 분산과 정부개입의 최소화

- 소극적 정부원칙의 재확인 : 정부는 번영을 창조하기보다는 이를 제한 혹은 파괴할 수 있음. 번영은 개인들의 극기(self-discipline), 창업정신, 저축과 투자의 산물임
-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이야기하는 저성장의 뉴노멀(New Normal) 경제를 부인함. 레이건 행정부 시기 어려운 경제를 극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금의 진단이 허구임을 주창
- 계층 간 분열을 조장하는 세금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주창하는 행동주의적 판결들에도 반대함
- 무역협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둘 것.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무역협정에도 반대할 것. 중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함
- 2011년 실행된 월가 금융규제 강화 개혁법안인 Dodd-Frank Act(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1)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함. 특히 이 법안이 만들어 낸 행정부 조직인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표명함
- 이의 연장선상에서 연방정부 조직의 비대화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혁을 요구함. 개혁의 초점은 연방정부의 권한 중 많은 부분을 주정부에게 돌려줄 것에 있음
- 경제부문에서 공화당 강령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첫째,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확장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 둘째,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연방정부의 권한을 주정부에게 이양할 것, 셋째, 권한 이양의 구체적인 정책 분야들은 세금, 최저임금, 노동규제 등이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은 더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

② 사회부문 I(A Rebirth of Constitutional Gov't) : 헌법질서의 부활

- 헌법에 나타난 네 가지 기본원칙의 재확인 : limited government, separation of powers, individual liberty, the rule of law
- 연방법원에 대한 비판 : 미국의 헌법적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동성 간 결혼, 낙태 등에 대한 연방법원의 진보적 판결의 영향을 고려한 반응으로 보임. 이후 연방대법관 지명과 인준 문제와 연계하여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
- 이후의 내용은 미국 건국 당시 연방헌법이 승인될 때 이에 부가되어 같이 통과된 10개조의 개정안들(amendments: 개인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고도 불리움)을 제시하며 훼손된 헌법질서를 구체적으로 제기함
- 주로 논쟁이 되는 사안은 동성 간 결혼과 관련된 일련의 사법 판결에 대한 비판과 그러한 판결이 초래한 개인권리 침해에 집중되어 있음. 연방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종교집단과 개인의 목소리를 자유와 권리 보장(First Amendment)의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주창함
- 더불어 총기소유의 권리(Second Amendment), 정부로부터 사적 영역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Fourth Amendment),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Fifth Amendment) 낙태금지를 주창하고 이와 관련하여 낙태권의 보장을 주장하는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금지할 것을 천명함
- 요약해보면 사회부문에서 공화당의 강령은 낙태와 동성애 등 가치갈등이슈를 둘러싼 보수적인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이 사회질서를 저해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음
- 더불어 이는 미국 사회의 문제들이 연방정부의 사적 영역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서 초래되었다고 보는 입장임. 특히 연방법원의 판결이 갖는 영향력에 주목하고 연방대법관 임명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금 각인시키고 있음

③ 사회부문 II(Great American Families, Education, Healthcare, and Criminal Justice) : 보수가치 회복 통한 위대한 미국사회 건설

-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연방정부의 개입에 대한 비판이 골자
- 동성 간 결혼 합법화에 대한 비판. 가족질서를 해치고 아이들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
- 교육부문에 있어서 연방정부에 의한 과도하고도 일률적인 개입에 반대. 민주당 행정부의 방식을 “one-size-fits-all approach”라고 명명하고, 교육현장을 잘 아는 주정부 주도의 교육정책 천명
- 학교 선택권 확대, 동성에 이슈 학교 정책에의 반영 반대, 고등교육기관의 이념적 편향성 비판, 높은 등록금 문제 해결책 등이 담김
- 건강부문에 있어서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of 2010)의 폐지 주창.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낙태’를 건강관리 문제로 편입하여 생명존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
- Stem Cell Research 허용 확대, FDA(Food and Drug Agency)의 규제 철폐 주장
-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공화당을 “a party of law and order”임을 강조하면서 범죄와 관련한 법률의 간소한 재정립, 범죄의 처리와 관련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명료화, 주정부의 재량권 확대, 사형제 합헌 재확인, 약물과의 전쟁 등을 제기하고 있음

④ 정부 부문(Government Reform) : 정부 관료와 규제의 축소

-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에 의한 연방정부 운영의 결과를 “과도하게 확대된 무반응 관료국가(bloated and unresponsive bureaucratic state)”로 규정하고 다양한 부문에서의 정부개혁을 촉구함

- 우선 저소득층과 노인층을 위한 의료부조제도인 Medicare와 Medicaid, 그리고 은퇴 후 연금제도인 Social Security 제도를 관리기구의 슬림화, 프로그램의 개선 등을 통해서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특히 핵심적인 내용은 예산 지원은 연방정부가 하되 그 사용은 주정부의 자율에 맡기는 운영방식(Block granting)을 채택하여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주장
- 트럼프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이민정책도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불법이민자의 사면을 전면 금지하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입국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겠다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 이외에 새로운 것은 없음
- 연방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과도한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때문에 몇몇 기관들을 전면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거명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들은 IRS(Internal Revenue Service),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D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LRB(Department of Labor and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등이 있음

5] 환경 에너지 부문(America's Natural Resources) : 실용주의 노선

- 농업 등 자연환경과 결부된 분야에서 민주당 행정부의 정책을 연방정부의 확대와 이를 통한 규제, 자율성 억압의 측면에서 파악, 비판함
- 특히 연방정부의 정책을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unelected bureaucrats)”에 의한 정당성 없는 규제 그리고 당파적인 민주당의 정치 이슈 확산의 일환으로 비판하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가 중시하는 환경문제 역시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에 기인한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가 보다 적합한 주체임을 강조
- 또한 유엔 등을 통해서 제기되는 환경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토협약(Kyoto Protocol)과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또한 환경문제에 관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정책들, 예를 들어 국내에너지 생산 증대, 공유지 개발, OPEC과 다른 원유생산국들의 담합 규제, Keystone XL Pipeline 추진 등을 펼칠 것임을 천명함
- 이러한 정책들은 공화당이 환경문제를 심각한 전지구적 문제로 보다는 국내 경제적인 그리고 무역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줌

⑥ 국제부문(America Resurgent): 미국 이익이 우선!

- 현재 미국이 처한 국제사회의 곤경은 카터 행정부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진단. 미국의 쇠퇴는 중국, 러시아, IS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레이건 식의 “힘을 통한 평화구축(peace through strength)”으로의 전환을 촉구함. 이를 위해서는 군축협정 폐기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의 군사조직 재정비와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강화, V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개혁
-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미국의 위치를 재확립: 아이젠하워와 그 이후 공화당 대통령들에 의해 유지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치 재구축
- 구체적으로 전세계 각 지역 즉, 중동, 이스라엘,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남 아메리카, 아프리카, 국제기구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들을 정리함
- 주요 내용으로는 이란과의 협정 파기, 이스라엘관계 확고히 유지, 북한과 중국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책임 있는 동맹으로서 NATO의 재정립, 쿠바와의 관계 개선 재고(再考) 등이 기술 되어 있음
- 더불어 UN이 추진하는 반 이스라엘 정책, 여성/아동/장애인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컨벤션, 군축조약, 환경과 개발정책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임을 재천명

2. 민주당 : '민주적' 가치 회복

- 7월 21일 채택된 강령의 서문에서 분열보다는 통합의 중요성, 경제불평등 문제에 대한 단호하고도 직접적인 해결, 환경문제, 다양성 증진 등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원칙임을 천명하고 있음
-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되어 있음
- 중산층 재건과 양질의 직업 양산, 경제불평등 해소 등 경제부문, 인종/성별/종교 등에 기인한 차별과 불평등 해소 등 사회부문, 선거권과 선거자금 그리고 민주주의 제고 등 정치부문,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등 환경부문, 교육과 건강, 안전 등 사회정책부문, 미국의 리더십과 안보위협에 대한 정책 등 국제부문 등이 거명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주창하는 미국의 가치들과 세계 여러 지역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마무리하고 있음
- 미국의 쇠퇴와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에 집중되어 있는 공화당의 강령과 비교해서 미국은 현재 국내외의 위협에 잘 대처하고 있으며 경제불평등 완화와 다양성 증진 등이 미국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방안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

Ⅰ 경제부문 : 중산층 재건과 경제불평등 완화

-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 최저임금수준을 15달러 까지 상승,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성별차이 없는 동등한 급여 지급, 가정과 양육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이익공유제 실시
- 저소득층, 장애인, 퇴역군인, 노년층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 약속
- 사회보장연금의 보호와 확대. 이를 위한 재원으로 고소득층(연소득 25만달러 이상)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및 연방정부의 지원 확대
- 우체국 등 공공부문에 대한 사유화 반대
- 21세기형 산업구조 구축, 기후변화에 발맞춘 제조업 개선과 새로운 직업창출, 과학/연구/교육/기술 분야의 혁신 추진, 규제완화를 통한 소기업 보호, 청년층을 위한 직업창출 등을 정책의 초점으로 제시
- 월가와 금융제도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Dodd-Frank 금융개혁법 사수, 금융 거래세 신설,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의 독립성 확보, 법무부를 통한 반독점 규제
-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과 부유층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 : 중산층의 민주당 vs. 부유층의 공화당으로 프레임
- 외국과의 경제·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review): 공정한 기준과 참여국가의 기준 준수 강제방안이 없는 협정은 참여치 않을 것이며, 이러한 원칙에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도 예외가 아님.

② 사회부문 : 차별철폐와 사회 불평등 해소

- 인종과 성별 등에 기인한 경제, 정치, 사회 등 모든 형태의 불평등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장 그리고 미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함
- 불평등은 편향된 정부 정책의 결과. 부의 불평등은 자유시장질서 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이의 완화를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이 필요
- 인종 프로파일링 중지, 약물과의 전쟁 등에 있어서 특정 인종에 대한 편향성 해소 등은 형법정의 실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함. 인종 편향성으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두 분야 즉, 마리화나 규제완화와 사형제 철폐
- 강제추방 없는 온건한 이민정책의 지속,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종교적 테스트를 부과하려는 시도에 반대, 시민권 보장 등의 정책 추진
- 여성, LGBT, 장애인, 종교의 자유 보장
- 농업 보호와 빈곤층 구제(세금공제제도를 통한 정책 지속: Earned Income Tax Credit, Child Tax Credit)

③ 사회정책부문 : 교육/의료 공공성 강화

- Community college 등을 무료화하고 대학생 부채 완화 지원정책을 실시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권 보장
- 소수인종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지원, 이익추구형 교육기관 감독·처벌(트럼프 대학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임)
- 유아를 위한 교육 보장, 교원, 교육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 시험 기반 처벌(test-and-punish) 교육시스템 종식
- 건강보험은 특권이 아닌 권리, 따라서 의료보험제도는 공공성을 가져야 함. 오바마케어 유지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제도(ACA's Medicaid)가 현재 19개 주에서 모든 주에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

- 공공건강센터 확충, 제약회사 감독을 통해 약 처방조제비, 약값 인하 추진
- Reproductive Health, Rights, and Justice (실질적으로는 낙태에 대한 권리를 의미) 보장
-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총기사용 규제 추진

④ 정치부문 : 선거권 보장과 민주주의 증진

- 투표권 보장정책 : 조기투표와 우편투표 확대, 유권자등록제도 간소화, 당파적 인종적 선거구 획정부정(gerrymandering) 방지, 선거일 휴일제 시행 추진
- 선거캠페인 재정제도 개선 : FEC(Federal Election Commission)의 감독 권한 강화,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super PACs 폐지 노력
- 정부개혁 : 유권자 친화적인 정부로, 정부에의 접근성 강화 노력

⑤ 환경부문 : 기후변화 적극대응

- 민주당은 (공화당과 달리) 환경문제가 지구적인 문제와 양질의 직업 창출 간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병립할 수 있는 문제로 봄
- 주와 지방정부가 보다 유연한 환경정책을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연방 정부도 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
- 환경문제는 일차적으로 저소득, 비주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침. 간단히 말해 환경적 인종주의(environmental racism).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깨끗한 공기와 물은 모두가 누려야하고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
- 오바마 대통령의 Keystone XL pipeline 반대에 동의하며 북극 그리고 대서양 연안에 석유시추를 반대하며, 환경과 자연보존을 저해하는 모든 노력들에 반대할 것임

⑥ 국제부문 : 미국적 가치 확산 통한 글로벌 리더십 구축

- 원칙에 기반한 리더십과 이를 통한 평화와 안정체제 구축 : 미국은 국제사회의 모범적 리더로서 역할을 포기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견지해야 할 것임
-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 트럼프의 강경하고 독자적인 국제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함
- 트럼프의 무슬림 비방은 미국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결국 미국의 리더십을 해침으로써 미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
- 미국이 처한 국제적인 위협으로 테러리즘, 시리아, 이란, 북한, 러시아,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을 거명, 각 위협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을 비판함. 예를 들어, 트럼프의 핵무기와 관련한 언급은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 비판
- 기후변화를 긴급하고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 트럼프와 공화당이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위협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과장된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 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추진할 기후변화에 대처할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이 국제사회에 확산할 여러 가치들을 제시: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 보장, LGBT 등 문화·사회·경제·인종적 약자들의 권리 보장, 반부패, 아동의 권리 보장, 고문 금지 등
-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에 위협한 실수가 될 것. 원칙에 근거해서 사안에 대처해야 할 것
- 주목할 만한 지역정책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지속과 중국의 적극적 역할 요구, 무역·통화·검열·인권 등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 지속,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 유지와 대만과의 안전보장협정 준수, 강고한 이스라엘 관계 유지하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국가 정책(two-state solution) 유지, NATO 동맹 강화, 쿠바와 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UN 등 국제기구의 역할 지지와 협력 약속 등이 있음

IV. 후보각축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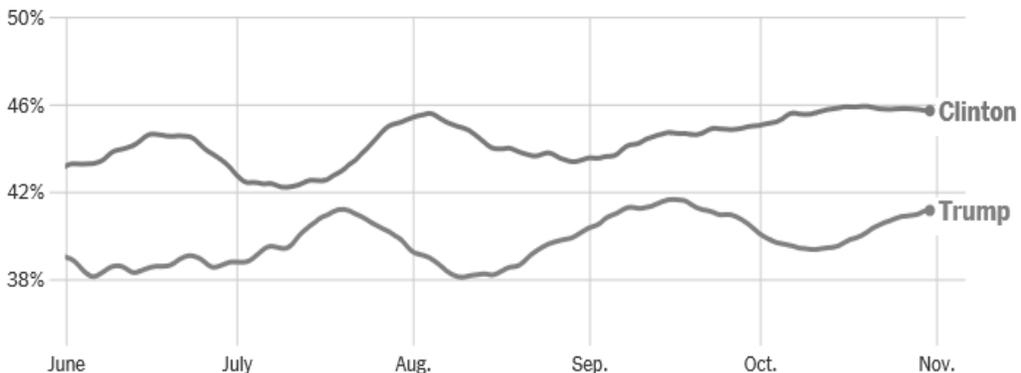
트럼프와 클린턴, 선거직전까지 앞치락뒤치락

- 민주당 클린턴과 공화당 트럼프 간의 대결로 압축된 2016 미국 대통령선거는 9월 초 본선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지율의 격차가 좁혀졌지만 트럼프의 잇따른 추문이 터지고 후보 TV토론에서 클린턴이 선방하면서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 민주당이 클린턴 후보가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것으로 예측되었음
- 물론 그 지지율의 격차는 평균 5-6%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트럼프 후보, 각종 스캔들에도 지지율 안정적 유지

- 지지율의 측면에서 클린턴의 우세 양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지만 40% 중반에서 정체를 이루었고, 후보로서의 자질과 과거 추문의 폭로, 그리고 공화당 지도부의 비판에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40% 안팎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결과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음
- 다만 후보자질의 측면에서 트럼프의 취약성이 두드러졌고,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높았다는 점, 그리고 공화당 지도부가 막판까지 적극적으로 유세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트럼프가 전체적인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측되었음

[그림 1]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 변화 추이



출처: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6/us/elections/polls.html?_r=0 (검색일: 2016.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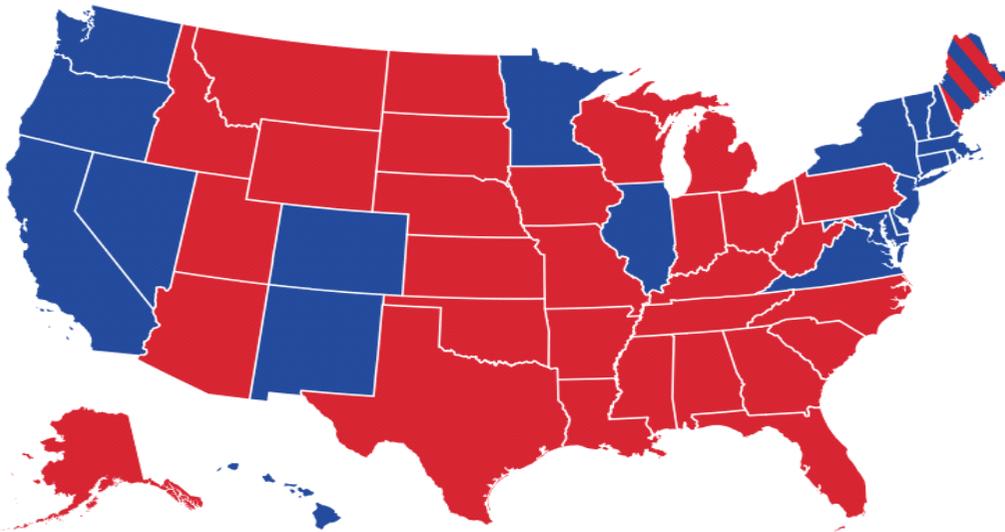
- 지지율이 아닌 “선거인단지도(electoral college map)”의 측면에서도 민주당의 우세는 한층 더 확연하다고 예측되었음
- 기존 민주당과 공화당의 우세지역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합주로 일컬어지던 콜로라도와 뉴멕시코, 그리고 버지니아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었음
- 이러한 예측은 선거 막판 클린턴에게 악재인 이메일 스캔들이 다시 불거졌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 기반해서 거의 모든 대중매체와 선거 분석가들에게서 거의 확실할 것으로 받아들여졌음

V. 선거결과와 예비적 분석

1. 대통령선거 결과 : 빗나간 예측

- 선거 직전의 예상과 달리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귀결됨
- 총 538표의 선거인단투표수 중 트럼프는 과반수를 크게 상회하는 306표를 획득하여, 232표에 그친 클린턴을 누르고 승리하였음. 다만 전체 유권자투표에 있어서는 클린턴이 트럼프를 백만 표 이상 앞선 것으로 추산되어 선거제도 보완에 관한 논란이 있음
- [그림 2]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클린턴이 경합주로 버지니아와 콜로라도, 네바다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트럼프가 노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중서부 지역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압승을 거두었음

[그림 2] 2016년 대선결과



출처: <http://www.270twin.com/>

-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최근 대선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고 때문에 손쉽게 가져가리라고 예상되었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트럼프가 승리하였다는 점

- 제조업의 중심지역으로 쇠락한 미국 경제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혔지만 금융위기 이후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놀라운 결과임

- 이러한 결과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 지역의 백인노동자들이 트럼프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정치적인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반면, 클린턴에 대한 비호감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까닭으로 이해됨

2. 클린턴은 왜 패배했는가?

① 주류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

- 주기적으로 변화와 새로움을 찾는 미국 유권자들의 특성
- 장기적인 역사 추세를 보면 한 정당이 행정부 권력을 갖고 있었던 평균 연수는 8.6년. 2차 대전 이후 미국 대선에서 한 정당이 세 번의 대선을 연속으로 이긴 경우는 레이건을 계승한 부시(G. H. W. Bush)가 당선된 1988년 선거가 유일
- 또한 후보경선과정에서 나타난 샌더스와 트럼프 등 아웃사이드의 열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대선의 경우 기존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대단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음
- 가장 직접적인 불신의 이유는 미국 금융위기의 발발과 이로 불거진 소득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함에 있어서 나타난 기존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임. 특히 2009년 금융위기를 통해 대공황 이후 가장 파급력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미국인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이 대단히 컸음
- 경제적 어려움으로 촉발된 불만은 이민, 낙태, 동성애 등 진보적인 정책적인 변화의 지속에 대해 두려움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저소득 저학력 백인유권자들에게서 가장 강하게 나타남
- 또한 지구화로 인한 전세계 경제구조의 재편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제조업과 전통산업 종사자들에게서 심리적인 박탈감이 높았음이 확인됨
- 결국 많은 유권자들이 기존 제도정치권에 높은 불만을 갖고 있었고 이들로부터 스스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음
- 이러한 상황은 오랜 정치적 경력으로 기존 정치인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클린턴에게 약점으로 작용한 반면, 막말과 구설수에도 새로운 인물로서 트럼프의 차별성을 부각시킴

② 대중매체에 대한 불신과 선거컨설턴트 중심 캠페인의 퇴조

-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클린턴 패배의 일차적인 요인은 미국의 경제회복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붕괴, 양극화 심화 등이 가져온 심리적 박탈감이 인종 간 정치적 차이를 넘어설 정도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음
- 그러나 클린턴 패배가 야기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선거자금과 캠페인 네트워크 등에서 압도적이었던 클린턴이 왜 실패하였는가?”
- 캠페인의 관점에서 클린턴 패배의 중요한 요인은 대중매체에 대한 불신 증폭과 20세기 중반 이후 그 역할이 두드러졌던 선거컨설턴트와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퇴조하였다는 점에 있음
- 20세기 중반 대중매체의 본격적인 등장과 여론조사 기법의 발달로 선거캠페인 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선거컨설턴트들이 등장하고 실제 선거과정에서 이들이 갖는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아졌음
- 이들의 역할은 총괄적인 캠페인 전략 생성과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등을 통해 후보자를 대중에게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당선되도록 지원하는 데에 집중됨
- 그러나 한편으로 선거에서 선거컨설턴트와 대중매체의 영향력 증대는 대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함
 - 우선 포괄적인 선거캠페인의 필요성과 대중매체 활용의 중요성으로 인해 선거비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선거에 임하는 후보가 유권자들보다는 점점 더 선거자금의 모금에 신경을 기울여야 상황을 초래
 - 더 중요한 문제는 후보들의 선거캠페인이 유권자 자체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보이는 이미지에, 그리고 대중과의 직접적인 접촉 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는 점
- 이런 문제들은 선거에 임하는 후보가 유권자층과의 접촉보다는 선거자금 확보, 그리고 대중매체 활용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결국 유권자와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짐

-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유권자들 사이에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제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더욱 증폭됨. 즉, 유권자들이 대중매체로 전달되는 정치 정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그들이 유권자의 입장이 아닌 “자신만의 게임”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부당”하게 자신들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
- 이번 선거에서 클린턴은 자질과 경험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등에서 트럼프를 압도하였고, 구축한 선거캠페인 네트워크 속에서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큰 흠결 없는 캠페인을 보여주었음.
- 문제는 대중매체와 선거컨설턴트 중심의 캠페인이 더 이상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때때로 그것이 작위적인 이미지까지 심어 주었다는 점에 있음
- 기존 방식의 선거캠페인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는 62%에 이르는 유권자들이 캠페인이 본격화되는 9월 이전에 이미 지지후보를 결정하였다는 사실(Exit Poll)
- 완벽한 캠페인은 클린턴의 흠결들(트럼프와 비교하면 사소할 수 있는 것들)을 유권자들에게 더욱 크게 각인시켜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배경이 됨
- 반면 트럼프의 파격과 기행은 그 내용에 관계없이 오히려 제도 정치인과 뚜렷이 구분되는 차별성으로 인식되게 하였음

3. 트럼프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① 유권자들의 정치적 불신 기반 캠페인 전략

- 이번 선거에서 보여진 트럼프의 캠페인 과정은 선거캠페인의 통념을 여실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음. 특히, 인종, 이민 이슈들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논쟁적인 이슈들의 지속적인 부각시켰던 점은 기존의 선거캠페인에서는 금기시되었던 사안들
- 사후적인 해석이지만 트럼프가 기존의 통념을 깨고 미국 내부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공화당 주류 그리고 캠페인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캠페인의 전면에 나섰다는 점이 그에게 기존 정치인과 다른 파격적인 이미지를 심어줌
 -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유권자들의 제도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함
 - 이는 선거캠페인 기간 내내 제도정치권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명하고 그것이 미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망가뜨려 놓은 직접적인 원인임을 부각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정치권이 아닌 '외부'의 인물이 필요하고 자신이 그러한 인물임을 내세우는 것
- 요약하면 트럼프는 미국 사회 특히 백인 유권자들에게 널리 퍼져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간파하고, 문제해결에 있어서 제도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부각, 그리고 자신의 차별성을 캠페인의 핵심전략으로 삼음

② 캠페인 방식에서의 차별점

- 트럼프의 메시지 전달방식은 복잡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무역(Trade), 테러리즘(Terrorism), 이민(Immigration)이라는 세 가지 간명한 원인들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하는 데에 치중하였음
 - 이는 제도정치권의 레토릭이 수사적이지만 대중이 체감하는 문제들과는 거리가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임

- 또한 대중매체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통해 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대중매체와 거리를 두고 대규모 군중 집회와 트위터(Twitter) 선거운동에 집중함
- 대중매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스스로 ‘차별’적인 이미지 창출에 도움이 되는 한편, 군중집회와 트위터를 통해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스스로 ‘관심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함
- 특히 트럼프가 수시로 행한 간결한 트위터 멘션을 통한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1930년대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의 ‘노변담화(fireside chats)’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자신에게 공격적인 대중매체를 우회하는 방편이 되는 동시에 다양한 뉴스를 만들어냄으로써 스스로 대중매체의 뉴스가 되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
- 실제로 트럼프는 선거 직후 대중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음 (“social media gives him a method of fighting back against negative news coverage” CBS, 60 minutes 와의 인터뷰, 2016.11.13.)

③ 네거티브 캠페인을 통한 상대 진영 와해전술

-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구도는 난민과 테러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사회적 우경화 분위기와 함께 세계화와 자본 그리고 금융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불만이 혼재되어 있던 상황
- 또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흑인 대통령 8년에 대한 불만과 저항감, 민주당 집권 8년간의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주류 백인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변화에의 욕구는 특히 백인 저소득 노동자 계층에 더욱 강렬하게 퍼져 있었음
- 트럼프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기성정치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클린턴의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하고, 이를 통해 클린턴 지지자들이 투표참여의향을 약화시키는데 집중하였음

- 특히 “30년의 정치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클린턴의 강점으로 여겨졌던 경험과 경륜을 역으로 클린턴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저하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함
-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적으로 2012년 보다 약 6백만 명 가량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러한 저조한 투표율은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야겠지만 상당수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이번 선거결과에 핵심적인 지역이었던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등 중서부의 소위 “쇠락한 제조업지역(rust belt states)”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까닭임
-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라기보다는 트럼프의 캠페인 전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클린턴의 패배”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임

4 의회선거 : 공화당, 다수당 지위 유지해

- 미국 의회선거의 역사적 양상은 선거의 주기에 따라 크게 영향 받음. 즉,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동시선거에서는 대통령의 소속정당의 후보들이 약진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대통령 임기 중에 의회선거만 있는 중간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차이는 동시선거에서의 후광효과의 존재와 중간선거가 정치권력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설명됨
- 상하원 모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선거주기에 따라 동일한 역사적 패턴을 보임
- 대표적인 사례로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중에 치러진 1994년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며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짐. 유사하게 공화당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에 치러진 2006년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의회권력을 차지함

- 반면 동시선거에서는 여당이 의회선거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경향은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할 경우에 더욱 두드러짐
- 2016년 의회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동시선거 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연동되기 쉬운 상황이었음
 - 이번 선거의 결과, 현재(2016년 12월 20일)까지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8석을, 하원에서는 공화당 239석, 민주당 194석으로 나타나 양원 모두 정당의 의석수 격차는 줄었으나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는 유지됨
 - 이런 결과는 공화당이 행정부 권력과 의회의 다수당을 동시에 장악하는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로 정책실행의 주도권을 잡았음을 의미함
- 우선적으로 현재 공석인 연방대법관의 지명과 인준에 있어서 공화당의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이는 연방대법원의 구성이 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됨을 의미하며, 현재 미국 사회가 첨예한 가치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인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주목할 만한 사안임
- 또한 이번 상원의 선거결과는 대통령선거와 거의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줌. 즉, 지금까지 확정된 33개의 상원의원 선거 모두 대통령 선거의 승자가 속한 정당의 후보들이 승리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과거 그 어떤 선거에서도 보지 못했던 결과임

VI. 평가와 전망

1. 트럼프 정치의 성공, 일시적인 현상인가

- 선거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관건은 이번 선거에서 목격된 여러 가지 변화가 항구적인 것이 될지 아니면 2016년에 국한된 일시적인 현상일지에 관한 전망이다
- 먼저 이번 선거에서는 여론조사와 선거컨설턴트의 영향력 퇴조로 대표되는 캠페인 방식의 변화가 목격됨
 -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는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정보의 생산과 전달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독점적 지위와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에 기인함
 - 유권자들은 대중매체의 분석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뿐더러 정치적 양극화와 다양한 매체의 난립으로 대중매체가 생산하는 정보에 피로감을 느끼고 때로는 불신하는 경향을 보임
- 문제는 대중매체와 선거컨설턴트가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만일 이들이 능동적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유권자들의 관심현안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대중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
-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제도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웃사이더로서 자신의 입지를 각인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차별화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에 기인함
 - 그러나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스스로가 펼치는 정책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고, 따라서 선거캠페인 과정에서의 '차별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기존 정치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로 이어져 스스로 덮에 걸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음
 - 문제는 그가 내세운 무역, 테러리즘, 이민 등 간명한 정책메시지들이 현실에 있어서 해결하기 대단히 어려운 난제라는 점
 - 특히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승리에 일등공신인 저소득 백인 노동자층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

- 따라서 과연 트럼프가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선거에서 받은 이들로부터의 지지에 보답하는지는 지켜볼만한 중요한 사안들임
- 그리고 민주당이 이들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를 꾀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뉴딜 이후 오래도록 이어져 온 노동계층과의 연계는 민주당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임
 - 비록 클린턴이 이번 선거에서 노동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음에도, 그것을 환경문제와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함께 내세움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결국 “정당유권자 재편성(partisan realignment)”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가시적 성과 여부와 민주당의 기존 지지층 회복 여부는 이번 대선 결과(현상)가 항구적으로 귀착될지 아닐지를 결정할 핵심 요인임
- 한편 이번 선거의 결과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당선으로 미국 유권자들은 또다른 변화를 선택하였으나, 이번 선거과정 속에서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근본적 가치들 즉, 관용과 평등,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신념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이 목격되었음
 - 특히 다양한 이민자 집단으로 구성된 까닭에 공동체의 통합과 유지를 중요한 과제로 안고 있는 미국 사회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미국의 근본 가치가 흔들리고 내부적인 분열이 조장되고 있는 상황은 미국 다원주의의 근간을 크게 흔들고 있으며 타협과 통합으로 지탱되어 온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음
- 트럼프의 당선으로 새로운 변화의 소용돌이에 들어간 미국 사회가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게 될지 당분간 관찰할 필요가 있음

2. 트럼프 내각 구성과 논란

- 선거 직후 일차적인 관심사는 트럼프 행정부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있음
-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 구성의 윤곽은 거의 드러난 상황임. 지금까지 지명된 주요 내각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다음과 같음
- Rex Tillerson (Exxon CEO, 국무부 장관), James Mattis (퇴역해군장성, 국방부 장관), Jeff Sessions (연방상원의원, 법무부 장관), Steven Mnuchin (ex-Goldman Sachs banker, 재무부 장관), Wilbur Ross (Investor, 상무부 장관), Andrew Pudzer (CEO of CKE Restaurants, 노동부 장관), Betsy DeVos (billionaire Republican Donor, 교육부 장관), John Kelly (퇴역해군장성, 국토안보부 장관), Ben Carson (외과의사,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 주택도시개발부장관), Elaine Chao (Former Labor Secretary, 상원다수당지도자 Mitch McConnell의 부인, 교통부 장관)
- 그 외 전 텍사스 주지사 Rick Perry, 전 알래스카 주지사 Sarah Palin, 오클라호마 주지사 Mary Fallon, 그리고 대선 기간 트럼프 캠페인에서 활동한 트럼프의 직계 가족과 스태프 등이 여러 직책으로 거명되고 있음
- 현재까지 지명된 인사들에 국한해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은 국무, 국방, 법무, 재무 등 핵심 부처의 장관으로 백인 남성들을 등용하고 있으며, 라틴계, 아시아계 인사가 각 1명, 흑인 3명, 여성 4명 등에 그치고 있음
- 또한 트럼프의 경력에 걸맞게 최근 공직경험이 전무함에도 국무장관에 지명되어 큰 논란을 빚고 있는 Tillerson, 재무장관 지명자 Mnuchin, 노동장관 지명자 Pudzer, 교육부장관 지명자 DeVos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주류 정치권이 아닌 재계 인사들이 주요 직책에 등용되고 있음
- 이러한 모습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모습과 크게 대조되고 있는데,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한 오바마는 첫 번째 내각을 8명의 남성과 7명의 여성으로 구성해 성별의 균형을 맞추었을 뿐 아니라, 9명의 소수인종 인사들을 등용

하고, 전임 부시행정부의 국방장관인 Robert Gates를 유임하고 당내 경쟁자였던 Hillary Clinton을 국무장관에 지명함으로써 다양성 확보와 정치적 안배를 크게 고려하였음

- 반면 트럼프의 현재 내각 구성은 백인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성별, 인종별 다양성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 더불어 재계 인사들이 공직경험 부재라는 논란 속에서도 등용되고 있음
- 주류 정치권에 대한 반감에 기대어 당선된 트럼프의 상황에 비추어 재계 인사들의 등용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지만, 성별, 인종별 다양성의 부재는 논란의 여지가 크며 이는 트럼프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과 정치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인적 구성은 엄격한 이민정책에 대한 강조와 미국 본연의 모습을 되찾겠다는 그의 캠페인 메시지가 실제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현재 지명된 인사들 중 많은 이들이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내각 구성의 성패가 달려 있음. 실제 국무장관 지명자 Tillerson에 대해서는 여러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청문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공산이 높음
- 따라서 청문회를 통해 지명자들에 관한 철저한 검증은 불가피하겠지만, 당선 초기 내각 구성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큰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트럼프의 지명이 대부분 관철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논란이 큰 만큼 내각의 구성원들이 실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회와 언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지속될 것이며, 문제가 불거질 경우 큰 비난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임

VII. 한국에의 시사점

미국주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야

- 트럼프의 당선 이후 행보로 예측할 수 있는 일차적인 변화는 자유무역의 기초를 이어왔던 그간의 정책과 달리 보호무역의 색채가 강화된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 미국 내에서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반자유무역주의 여론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기초가 보호무역주의의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서부의 제조업 중심지역인 소위 “Rust Belt States”의 선호는 무역정책의 전환을 통한 직업 안정성의 강화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됨을 의미함.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지지에 호응할 필요가 있고, 노동계의 지지가 필요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들의 지지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미국에서 대외문제보다 국내정치적 이슈들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적 이슈가 다른 어떤 이슈를 압도하는 상황을 예고하는 바, 이전에 비해 보호무역의 강화와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트럼프는 경선과정에서 이미 “TPP는 미 역사상 최악의 협상”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고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에 큰 변화가 올 것임을 예고하였음

미-중관계의 불확실성 고조

-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는 조심스레 그 관계를 이어 온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통상, 무역, 통화의 측면에서 미국에 유리한 반대급부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에 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불공정 무역관행, 화폐조작, 인터넷 검열,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버 공격 등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공통적으로 주창, 일종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음

- 이러한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은 우리의 입장에서 전략적이며 유연한 외교를 취할 필요성을 제기함. 즉, 사안에 따라 때로는 미국의, 때로는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양 국 사이에서 자율성을 갖고 균형을 잡는 해안이 필요한 상황임

대북 문제, 주도권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책 모색해야

- 한편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ignorance) 정책에 대한 변화가 어떤 형태로든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는 그간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왔음. 김정은을 향해 “미치광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고 2015년 9월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뭔가 보여줘야 할 때”라고 언급한 점, 그리고 중국에 압력을 가해 북한 정권을 끝장낼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공언해 왔음
- 이에 더해 최근 미국 의회에서 진행된 미국의 대북정책관련 청문회에서는 그간의 대북정책에 오류에 대한 많은 질책과 회의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되며 미국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부각되었음
- 따라서 극도의 경색국면 속에 대부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현재의 남북한 관계에 벗어나서 어떤 방식이든 남북한 관계의 접촉면을 넓히고 이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외교를 구사하는데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북한 핵문제는 미국에게도 골칫거리인 만큼 단순히 제재강화를 넘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방식을 능동적으로 고려해 이를 대미, 대중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협상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요컨대 안보와 무역의 압박에 대해 북한문제와 남북한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그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결국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중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 그리고 주한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 분담금 증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무역정책에 대한 압박 역시 이전보다 더 심화될 것 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